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 집중 지도 기간(8. 26.~9. 11) 운영

– 체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여 생활 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8월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

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등을 제공하여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6개 지방 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린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2019년 8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 진정사건 379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2019. 7. 16)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8. 16 기준)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업종별: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